위기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

손 열
연세대학교

2011년 2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1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위기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

손 열
연세대학교

I. 서론

무역은 국부를 증진하는 주요 수단이다. 무역 중심의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고도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국가들이 대표적이다. 또한 무역은 외교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교역상대국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국가가 적국이면 비경제(diseconomy)를, 우방국이면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가져다준다(Gowa and Mansfield 1993). 따라서 전자에게는 무역을 통제하여 견제하고, 후자는 무역을 확장하여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무역을 통해 상대국의 부가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국가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국의 성장노선(수출선)을 자국의 수입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그 국가를 구조적으로 종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Hirschman 1945). 무역패턴을 전략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외교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이렇듯 무역은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가들은 국제무역체제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구성하고자 해왔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무역질서는 전간기 주요국간 경쟁적 보호주의의 결과로 세계대전을 치렀다는 인식 속에서 일종의 지구공공재로 받아들여졌으나 다른 한편으로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이익을 담는 것이기도 하였다. 자유무역은 경쟁우위국가(즉, 패권국)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이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Krasner 1985). 미국은 관세무역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 속에서 일련의 라운드를 주도하면서 무역자유화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반면, 미국은 서유럽이 국내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주의적 규제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였고, 일본과 한국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상주의적 정책을 취하는 것도 용인하는 이른바 '내장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를 추구하였다(Ruggie 1982). 냉전이란 지정학적 고려 때문이었다(Ikenberry 2004).

냉전이 끝나고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지구화(globalization)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서 이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지구화를 의미하는 언어이고 패권의 상징이었다. 자유시장, 작은 정부, 대외개방이란 자본주의 표준을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미국은 한편으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을 활용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자유무역정책을 추구하였다. '자유무역'은 경제뿐만 아니라 도덕 원칙으로서 경제·제도적 개혁, 부패타파, 자유의 습관(habits of liberty)을 고양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White House 2002, 21-22). 다시 말해서, 단순히 무역장벽을 허물겠다는 것을 넘어서 국내체제도 특

정하게 변화, 수렴시키겠다는 것으로서, 이제 내장된 자유주의는 부정되었다. 더욱이 1997 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의 과도한 개입이 결과적으로 기구의 효능을 감퇴시킴에 따라 워싱턴 컨센서스 전도사로서의 기능 역시 약화되면서, 자유무역은 미국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진하는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워싱턴 컨센서스란 미국적 질서를 확산하려는 노력은 무역의 차원에서도 도전을 받게 된다. 1999 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시애틀 회의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론자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였고, 곧이어 2001 년 도하(Doha)선언도 정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속에서 미국의 경쟁국들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유럽국가들은 경제통합을 통해서 단일경제권을 형성하였고, 동아시아 국가들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망을 확대, 심화시켜왔다(Dent 2007). 이에 대해 미국은 2002 년을 전기로 국제기구를 통한 질서/레짐 구축으로부터 지역 및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략을 전환하게 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무역질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 및 소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은 상대국에 대한 서로 다른 경제적, 전략적 이해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엮어 특정한 레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아키텍쳐와 고도의 추진전략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21 세기 경제의 공간은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적으로 통합되는 상호의존의 장(場)이기 때문이다. 생산네트워크와 그 속에서의 산업내(intra-industry), 산업간(jnter-industry) 무역이 다양한 경제행위자들을 촘촘히 연결해 나가는 경제공간인 만큼 권력장의 속성 역시 전통적 국제정치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다. 자유무역협정(FTA) 경쟁의 본질은 한 국가가 타국가를 강요하여 편 가르고 줄 세우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여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는가 하는 네트워크 경쟁이 될 것이다. 여기서 네트워크 경쟁은 구성원(노드)이 네트워크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능력, 즉 네트워크의 플랫폼을 설계하는 능력(architectural power), 둘째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 중개하는 능력(positional power), 셋째,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능력(social power), 끝으로 이런 대외적 시도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동원하는 능력에 달려있다(Grewal 2008; 김상배 2009; Kahler 2009).

이 글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여 미국적 질서의 구축과 재구축, 이에 대한 도전의 동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의 세계무역레짐 구축 전략을 기술한 다음, 둘째, 역내 권력이동의 추이와 본질의 분석, 셋째, 2008 년 위기를 계기로 전개되는 새로운 정치경제 동학의 분석, 끝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엮일 지역무역체제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향후 지역 무역질서는 비대칭적 상호의존의 심화를 통해 중국 중심으로 짜이는 무역네트워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항네트워크의 도전으로 네트워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쟁력은 네트워크 플랫폼을 여하히 설계하여 역내국가들을 끌어들이는가에 달려있다.

II. 미국의 패권질서 : 워싱턴 컨센서스의 부침

워싱턴 컨센서스는 자유시장(free market)이란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구현하는 이념 프로그램이다. 애당초 이는 워싱턴에 소재한 기구(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미 재무부)들이 중남미국가들에게 제공한 정책제안의 최소 공통분모로서 자유화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의미하였으나(Williamson 1989), 이후 신자유주

의 혹은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라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이념과 동일시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제 3 세계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정책 매니페스토(policy manifesto)로 확장되어 사용되어왔다. 여기서 무역은 핵심적 정책수단이다. 자유로운 무역으로 국내제도를 개혁하고 시장기제가 작동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자유무역은 부의 증진수단인 동시에 법치와 민주정부를 추동하고 자유로운 삶을 구현하는 정책수단인 것이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세상을 풍미한 시기는 냉전종식 이후인 1990 년대부터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세계무역질서를 '열린 국경, 열린 무역, 열린 마음'으로 표현하였고 나아가 빌 클린턴은 시장민주주의 공동체를 주창한다. 자유 즉,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공유하는 세계를 만들려는 구상이다. 이는 미국의 세계비전이지만 곧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였다. 클린턴기의 미국의 정책은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모두에게 상호이득이 된다는 자유무역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려 하였다. 오랜 맹방인 일본이 시장개방의 타겟이 되었고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함께 미국은 지역적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란 제도적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개방을 추구하였다. 미국은 1993 년 보고르(Bogor) 목표, 1996 년 자발적 조기자유화조치(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자유화 드라이브를 걸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전성기는 1997 년 동아시아금융위기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0 년대 초반 금융자유화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더 많은 국제자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제적 압력 즉, 워싱턴 컨센서스의 전파 때문이었다. 개방에 따른 내부적 부적응 즉, 관리, 감독체제의 미비와 비대칭적인 - 불균등한 - 자유화의 결과로 동아시아는 금융위기에 함몰되었고, 이들에 구제금융을 공여한 국제통화기금(IMF)은 그 대가로 강도 높은 워싱턴 컨센서스 이행조건을 강요하였다. 예컨대, 한국은 고금리, 긴축정책을 넘어 금융시장 구조조정, 자본거래자유화, 기업지배구조 개혁, 노동시장개혁과 함께 무역자유화까지 포함한 전방위 신자유주의개혁을 요구 받고 이행해야 했다. 요컨대,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부적절한 수용으로 야기되었고 위기극복을 위해 이를 더욱 철저히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미있게도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가혹한 이행조건은 역으로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통화기금(IMF)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혹한 이행조건을 받지 않으려는 까닭이었다. 동아시아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지 않기 위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임으로써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두 국제기구가 추진한 워싱턴 컨센서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념적 반발이 대두되었다. 특히 시장개방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일부 선진국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개도국의 논리, 시장원리주의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실종을 비판하는 유럽의 목소리, 환경과 노동 가치를 희생한다는 선진국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비판이 어우러지면서 1999 년 〈시애틀 WTO 회의〉는 파행을 맞이하였다. 미국적 질서에 대한 최초의 조직적인 대규모 반기이었다.

이어서 2001 년 〈도하라운드〉 역시 자유무역에 대한 반기로 점철되었다. 무역에 개발이슈를 연계시키고, 농업, 서비스, 환경,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대립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2003 년〈칸쿤 회의〉 역시 특별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끝나게 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추진이 지구다자기구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인식한 미국은 지역다자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 추진하기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그 핵심인물은 졸릭(Robert Zoellick)이었다. 당시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대표로서 그는 이른

바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란 언어로 새로운 무역정책을 표현하였다. 지구다자협정, 지역,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상호보완적이고 상호강화적 형태로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Zoellick 2002). 여기에는 자유무역이 단순히 경제적 부를 획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함께 깔려있다. "개방무역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자유의 습관을 강화한다"는 부시의 메시지처럼, 무역은 비극적인 9.11 테러사태를 전기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란 미국의 목표를 추구하는 하나의 중요수단으로 간주되었다(White House 2002).

구체적으로 졸릭은 무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네가지 범주의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비대칭적 상호주의'(asymmetric reciprocity)로서 시장권력의 비대칭성으로 협상력을 확보하여 미국기업에게 유리하도록 상대국 시장을 개방한다. 둘째, 포괄적 무역협정의 촉매제 혹은 벤치마킹이 되는 선례 혹은 모델을 구축한다. 셋째, 상대방의 국내 시장주의적 개혁과 민주제도를 지원한다. 넷째, 지역의 주도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한다.

히갓(Higgott 2004)에 의하면 부시정부의 일방주의는 자유주의-이상주의적 근본주의라는 희한한 이념적 조합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에 있어서 '지구화의 안보화'(securitization of globalization)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혹은 워싱턴 컨센서스적 정책을 전략적 목표 하에서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를 지지하는 제도적 장치는 '초당적 무역촉진권한'(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of 2002)이었다.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협상에 대한 신속지원(fast-track)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균등하며 상호적인 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당시 테러와의 전쟁이란 상황적 맥락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은 요르단, 칠레, 싱가폴, 호주, 모로코, 오만, 바레인,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혼두라스, 니카라과,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이었다. 또한 교섭중단 국가로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있다. 이들은 한국과 호주를 예외로 하면 경제적 규모가 크지 않은, 따라서 경제적 가치보다는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여 선정한 국가들이다. 미주지역 국가들은 미국이 지역을 견고하게 확보한다는 전략적 고려, 이슬람 국가들은 테러와의 전쟁이란 맥락에서 선정되었다(Sohn and Koo 2010). 예컨대, 미국은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시작하면서 "말레이시아는 온건한 무슬림국가로서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은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목표를 증진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III. 경제적 권력이동

전후 무역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은 2000 년대 들면서 장기적 쇠퇴의 길을 얻게 된다. 그 대표적인 지역은 동아시아이다. 냉전기 압도적이던 미국무역의 비중은 꾸준히 저하하고 있다. 반대로 역내 무역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50 퍼센트에 근접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 비해 이렇다 할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존재하지 않고, 특히 역내 경제의 8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결여된 속에서 50 퍼센트 전후의 역내 무역비중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상대적 비중은 미세한 증가세이다(손열 2008b).

둘째로 투자의 측면에서도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동아시아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 추이를 보면 1990 년대 중반까지 아세안에 집중되던 직접투자는 이후 중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역내의존도(전체 유입액 중 역내국가의 투자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총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중 역내 투자의 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 년 기준으로 70 퍼센트에 달한다. 이에 비하면 동아시아는 40 퍼센트 수준이지만 이 역시 상당한 수준이며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손열 2008a).

이렇게 무역과 투자의 역내비중이 높은 까닭은 양자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의 존재 때문이다. 즉, 생산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산업 내 교역의 증가 혹은 네트워크 무역의 증가, 그리고 투자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 년대 후반 토요다와 같은 일본의 수출기업(주로 자동차와 전기기계)은 동남아에 생산시설을 이전, 생산네트워크를 짜 왔으며, 1990 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중국민족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가 빠르게 확장되어 왔다. 한국의 다국적기업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화가 확산과 심화의 과정을 겪을수록 역내 무역과 직접투자는 증가되는 것이다. 동아시아경제권은 이러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2000 년대 들면서 이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Hatch, forthcoming).

끝으로, 무역과 투자에서 이상과 같은 동아시아 역내통합의 흐름 속에는 중국의 부상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등장하였고 중국집중의 추세는 지속되어왔다. 2010 년 시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대중국무역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일본의 경우 20 퍼센트, 한국은 22 퍼센트이다. 1997 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탈출과 회복에 노력을 경주하던 한국에게 중국시장은 최대의 수출시장이 되어왔다. 또한 2001 년 이래 일본의 불황탈출에 혁혁한 기여를 한 것은 대중국수출이었다. 이런 점에서 유럽 및 북미와 견줄 만한 세계 3 대 경제권으로서 동아시아의 부상은 중국과의 동반부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물부문에서의 추세는 제도부문에서의 추세로 이어진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대신하여 아세안+3(ASEAN plus Three: APT)가 주요한 지역협력포럼으로서 자리잡게 되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역시 지역다자제도로서 역할을 떠안고 있다. 한편 역내 양자 FTA 체결도 활발하다.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과 경쟁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아세안(ASEAN)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별도로 구축해 왔다. 한국 역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TA)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ASEAN)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있어서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로서 부상할 수 있었다. 반대로 미국은 싱가폴,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키고 한국과는 협상체결 후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와 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중단 상태이다. 역내 최대경제국인 중국 및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단 한 개(싱가폴)의 자유무역협정(FTA) 만을 맺고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복수의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속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무역정책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대두되었다. 맥스 보커스(Baucus 2004) 상원의원은 "미국이 아시아 무역정책을 등한시하는 사이 중국이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동아시아국가들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관여를 희망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응해 일본 및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7 년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역시 미일동맹간 포괄적 동맹강화를 위해 경제동맹의 성격을 갖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Armitage and Nye 2007, 17-18). 부시정부는 2006 년 〈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을 엮는 아 · 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을 어떻게 엮을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없는 선언적인 제안에 그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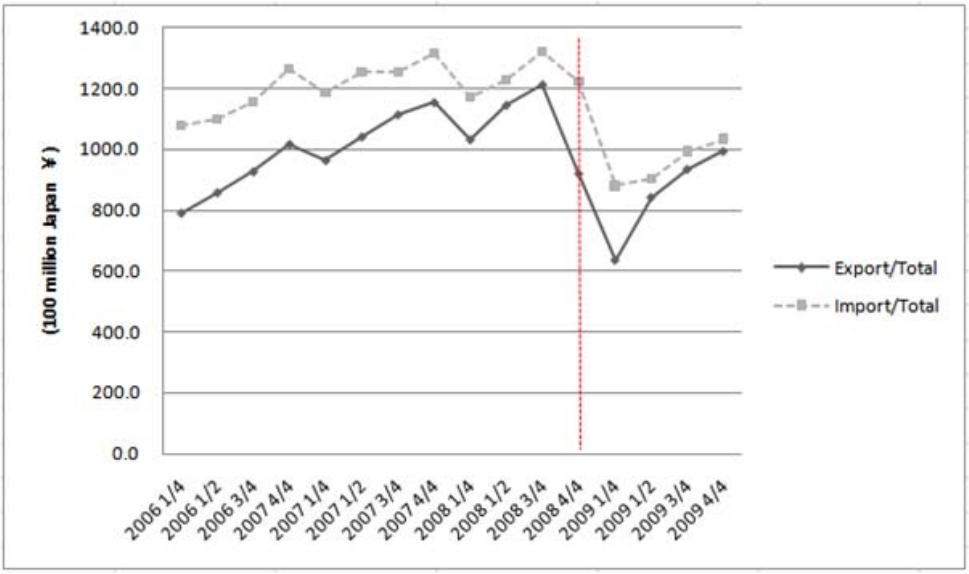
요컨대, 지구다자협상이 결렬, 지지부진하면서 미국은 경쟁적 자유화란 슬로건 하에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였다. 경제적 고려와 전략적 고려가 복합된 무역정책이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이란 상황적 맥락에서 무슬림 국가, 그리고 지역을 엮는다는 맥락에서 중남미 소국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었다. 그런 속에서 동아시아의 시장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중국이 그 허브로 부상함으로써 워싱턴 컨센서스로 상징되는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나선 까닭은 부분적으로 여기에 있다(Sohn and Koo 2010). 미국은 중국이 허브가 되는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해 링크를 놓으려 하였다.

IV. 세계금융위기의 충격과 그 이후

2008 년 9 월 리만쇼크로부터 확산된 세계금융위기는 동아시아에 두 가지 심대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두 가지 현상, 즉 동아시아 경제의 통합과 중국 부상의 가속화가 그것이다. 통합과 부상의 동학을 연출하던 동아시아는 월스트리트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제적 무역, 투자, 국제금융거래가 급격히 수축되면서 제 2 차대전 후 최악의 '탈'세계화(de-globalization)가 일어난 때문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추계에 의하면 2009 년 지구전체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는 전년대비 -0.9 퍼센트를 기록하였다. 국제무역은 -11.8 퍼센트, 국제자본이동은 -82 퍼센트이고, 2009 년 경제수축이 최고절정시기에 이르렀을 때 금융자산 손실이 무려 50 조엔이었다. 세계최대경제국인 미국 국내 총생산(GDP)의 3.3 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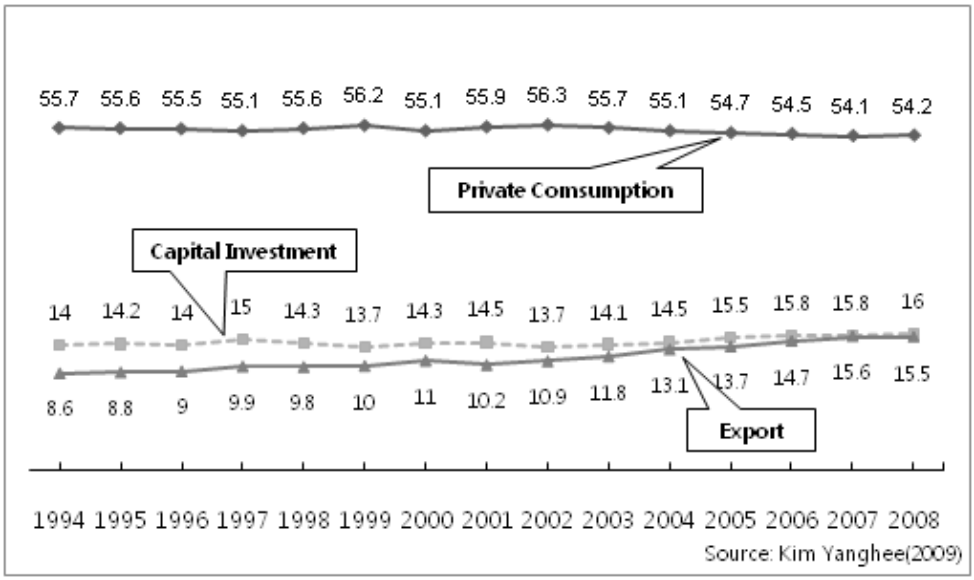
사실, 동아시아는 한국을 예외로 하면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다. 오히려 무역위기에 말려들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수축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이 지역으로의 수출 혹은 이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급격히 축소된 것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까닭에 미국과 유럽시장의 수축에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동아시아국가들이 일관되게 타격을 입은 것은 이들 경제간의 상호의존이 심화된, 통합의 경제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전체 무역 중 역내무역비중의 축소가 북미와 유럽에 비해 더욱 컸다는 사실은 네트워크화된 경제구조의 반증이기도 하다(Athukorala 2009, 28).

[그림 1] 일본의 대중국무역 추이, 2006-2009 (무역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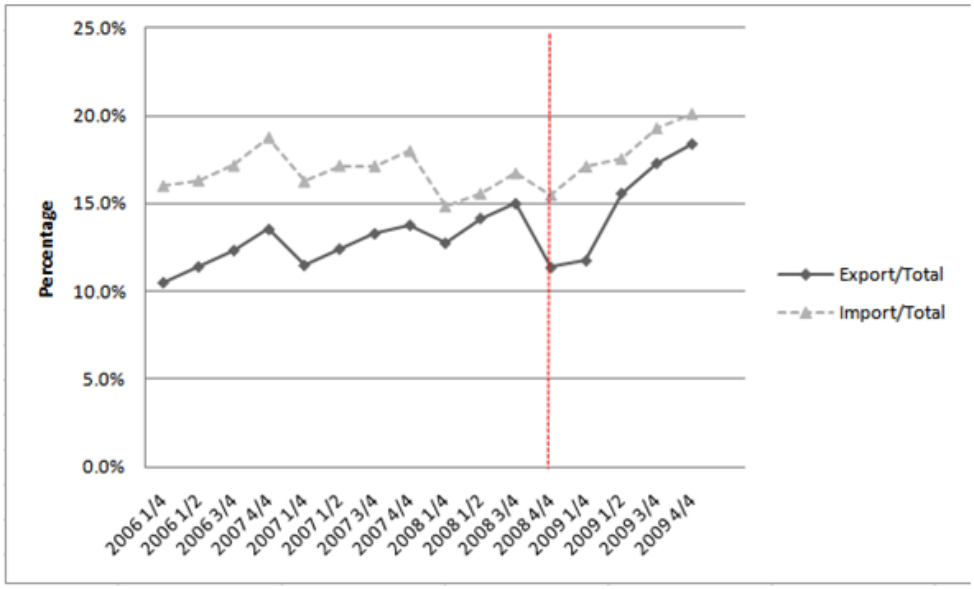
출처: Trade Statistics of Japan, Ministry of Finance

[그림 2] 일본의 GDP에서 소비, 투자, 수출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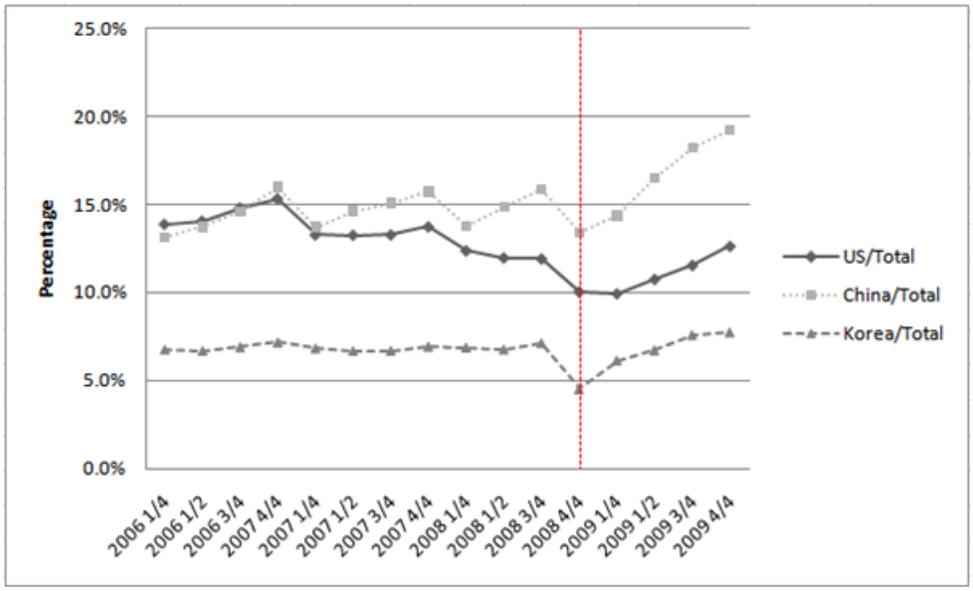
출처: Kim Yanghee (2009)

[그림 3] 일본의 대중국무역 추이, 2006-2009 (무역비중)



출처: Trade Statistics of Japan, Ministry of Finance

[그림 4] 일본의 무역구조, 2006-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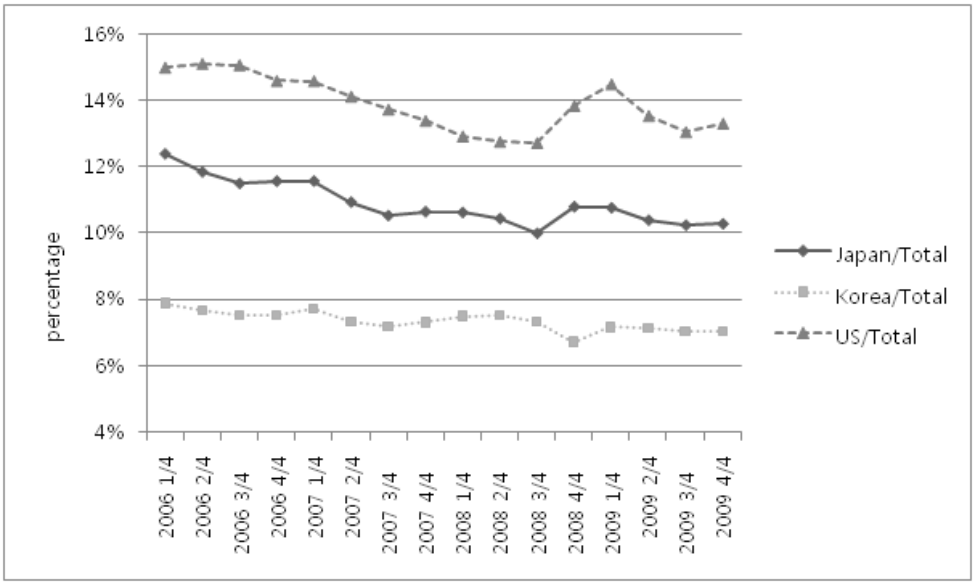


출처: Trade Statistics of Japan, Ministry of Finance

한편 세계경제가 위기로부터 회복세에 들면서 동아시아의 역내무역도 회복하기 시작한다. 특히 축소되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일본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시사적이다. [그림 1]의 일중무역구조를 보면 과거 20 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대중국무역비중은 2008 년 9-12 월 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추락하였다. 2008 년도 7-9 월 15.5 퍼센트에서 10-12 월 13.4 퍼센트로 2.4 퍼센트 축소되었다가 급격히 회복하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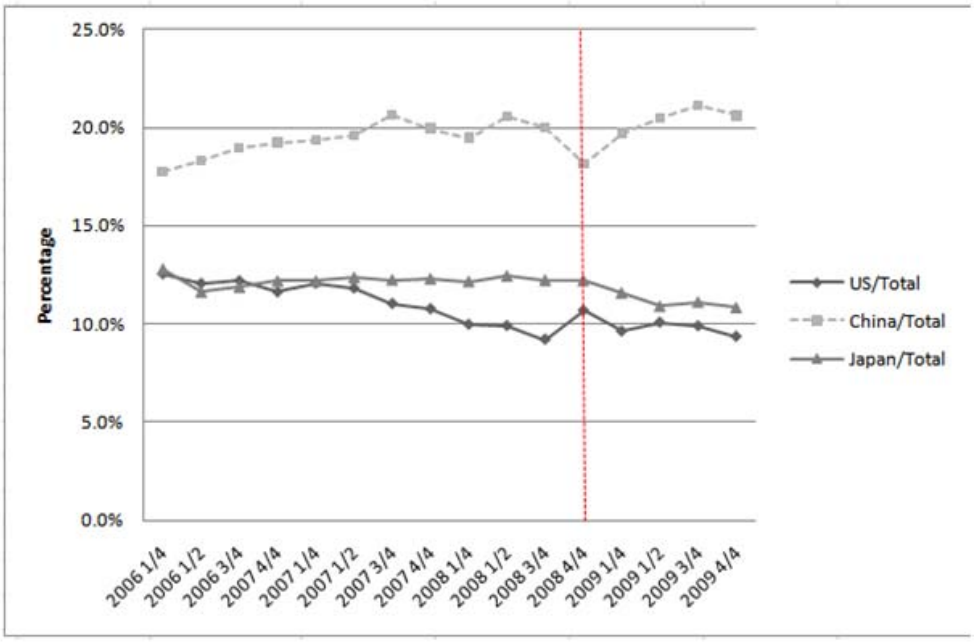
년 10-12 월 19.2 퍼센트를 기록한다. 위기는 중국비중의 축소(-2.1 퍼센트)를 가져왔으나 (즉, 곧이어 급격한 확대(+6.8 퍼센트)로 이어져 위기이전보다 대중국무역비중이 확대(+3.7 퍼센트)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위기발생 직후 일시적인 탈지역화(de-regionalization) 현상을 보인 후 곧바로 재지역화(re-regionalization)가 진행된 것이다. 양자무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 3]에서 주목할 점은 위기의 정점(2008 년 10-12 월)을 지난 이후 1 년간 일본의 대중국수출 비중의 확대가 수입비중의 확대를 능가한다는 데 있다. 대중국수입비중이 15.5 퍼센트에서 20.1 퍼센트로 증가(+4.6 퍼센트)한 반면 대중국수출은 11.4 퍼센트에서 18.4 퍼센트로 더욱 증가(+7 퍼센트)하였다([그림 3]). 이런 결과 역사상 최초로 대중국수출이 대미국수출을 상회하는 기록이 등장한 것이다. 2000 년대 일본이 국내소비와 자본투자가 장기간 부진한 속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룩한 이유는 수출증대에 있기 때문에 위기 이후 대중 수출증대 현상은 심각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그림 2]). 대조적으로 중국의 경우 대일무역비중은 위기절정의 2008 년 10-12 월 11 퍼센트에서 1 년 후인 2009 년 10-12 월 10 퍼센트로 오히려 근소하게 축소되었다. 보다 자세히 대일수출은 동기간 11 퍼센트에서 8 퍼센트 (-3 퍼센트)로, 대일수입은 14 퍼센트에서 13 퍼센트 (-1 퍼센트)로 각각 축소되었다([그림 5]).

[그림 5] 중국의 무역구조, 2006-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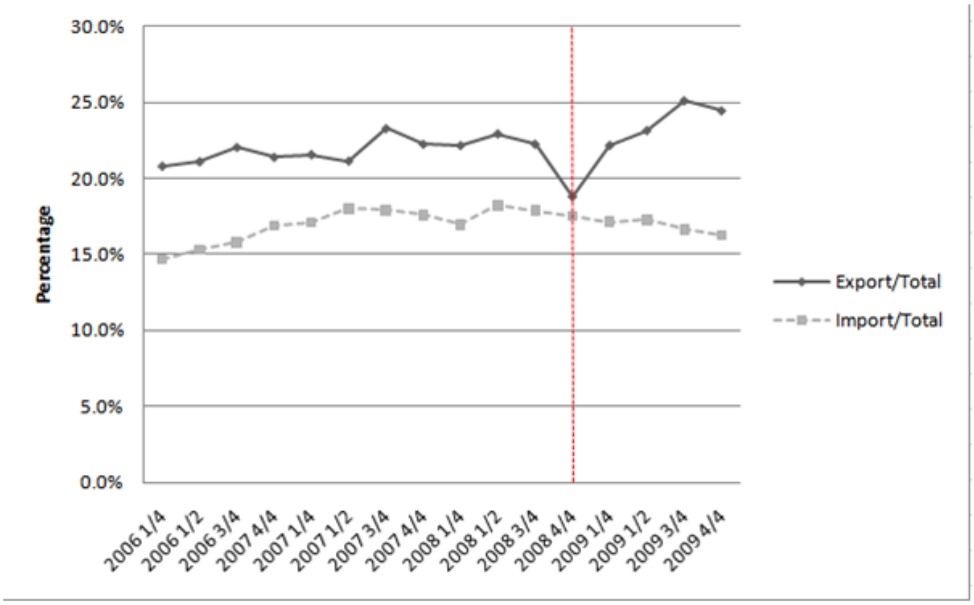
출처: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rade Statistics

[그림 6] 한국의 무역구조, 2006-2009



출처: Bank of Korea

[그림 7] 한국의 대중국무역 추이, 2006-2009(무역비중)



출처: Bank of Korea

한국의 대중국무역의 추세 역시 일본과 대단히 유사하다. 과거 10 년간 급격히 증가해온 대중국무역비중은 2008 년 9-12 월 위기를 겪으면서 일순 추락하였으나 (20 퍼센트 → 18.2 퍼센트) 곧바로 회복하여 2009 년 10-12 월 20.6 퍼센트를 기록한다([그림 6]). 위기이전보다 대중국무역비중이 근소하게 확대(+0.6 퍼센트)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국의 경우 앞서 [그림 5]에서 보듯이 대한무역비중은 위기 전후 모두

커다란 변화가 없이 7 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무역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대중무역 비중이 굴곡을 겪은 반면 중국의 대한무역비중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흐름을 비대칭적 상호의존(asymmetric interdependence)의 심화로 표현할 수 있다. 중국이 단순히 역내무역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넘어서 무역관계의 비대칭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현상은 특정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코헤인과 나이(Keohane and Nye 1976)는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동학이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의 정도에 따라 변화하며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유주의자가 상정하듯이 반드시 협력(cooperation)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만일 한 국가가 거래하는 상대국가에 비해 상호교역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교역관계가 약화되거나 중단될 때 초래되는 비용이 더욱 클 것이므로 교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협상력을 증대시킨다. 허쉬만(Hirschman 1945)은 《국력과 대외무역의 구조(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에서 국가간 비대칭적 상호의존구조가 약자(즉, 거래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의존이 높은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을 강자(즉, 거래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의존이 낮은 국가)의 선호에 맞추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허쉬만에 따르면 상대국에 대한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위기 시 변화의 정도가 클수록,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상대국에 대해 비대칭적 열위의 상호의존을 가져오며 따라서 협상력이 감소된다. 이를 일중무역구조에 대입해 보면 ① 일본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중국의 대일의존도를 상회하며 (작년 연말 기준 일본의 대중국의존도는 20 퍼센트이고 중국의 대일의존도는 13 퍼센트), ② 위기를 겪으면서 일본의 대중무역의존도가 뚜렷이 증가되는 반면 중국에 있어서 대일무역의존도는 근소하게 감소하고 있고, ③ 일본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수입의존도를 상회하고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중국에 대한 비대칭적 열위의 상호의존이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오히려 더 심하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국인 반면 중국에게 한국은 7 퍼센트를 점유하는 국가에 불과하다. 위기 이후 상호의존도의 상대적 차이는 심화되고 있다. 끝으로 한국은 중국시장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2009 년도 한국의 무역흑자가 미국달러(United States dollar: USD) 405 억인 가운데 대중국 흑자가 무려 324 억을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①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중국의 대한국 무역의존도를 크게 상회하며 (작년 연말 기준 한국의 대중국의존도는 20.5 퍼센트이고 중국의 대한의존도는 7 퍼센트), ②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대중의존도가 뚜렷이 증가되는 반면 중국에 있어서 대한의존도는 변함이 없으며, ③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점에서, 한중관계의 비대칭적 열위의 상호의존은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그림 5]와 [그림 6]).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이 증가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첫째, 중국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0 년 중국은 10 퍼센트의 GDP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Mussa 2010), 중국경제의 회복과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을 적절히 조절하고 인플레억제에 주의한다면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Lardy 2010). 둘째,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중국정부의 재정투자 역시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인민폐(renminbi: RMB) 4 조 규모의 거대한 재정출동을 통해서 경기자극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은 기계관련제품, 자동차, 가전제품, 그리고 그 관련 부품과 원재료,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중국정부의 경기자극책에 의해 내수가 확대되어 주변국의 중국수출이 증가되었다. 중국정부의 정책이 주변국 경기회복을 후원하는 구도가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다(日本貿易振興機構 2010). 그런데 중국은 향후 10 년간 재정적자를 지탱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지만수 2010). 역내 수요창출의 주요원천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셋째, 세계 경제 2 위국 일본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고평가되어 있는 엔화덕분에 그 지위를 중국에 넘겨주지 않고 있으나 양국간 순위의 역전과 그 격차의 확대는 필지의 사실이다. 일본경제는 몇가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GDP 200 퍼센트에 접근하는 거대한 정부재정적자는 일본경제의 활력을 얽어매고 있다.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낳고 따라서 소비축소로 이어져 디플레현상을 가져오는 구도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는 이를 강화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경제는 이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내가 아닌 해외수요에 의존해야 하며 중국이 그 수요의 주원천이 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한국이다. 한국은 명백히 V 자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 이 회복과정은 세계경제의 회복, 특히 중국경제의 회복에 연동되어왔다. 국내수요가 특별히 늘어나기 어렵고, 서구선진국 시장이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은 지속가능한 중국시장, 대중무역에 달려있다.

V. 새로운 아키텍쳐?

위기 이후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 행위자는 중국이다. 2000 년대 들면서 중국은 전략적 초점을 동남아에 맞추어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전격적으로 체결하였고, 아세안+3(APT)를 주도해 왔다. 아세안+3(APT)가 역내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기구들 가운데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유이다. 이런 가운데 여타 아시아 인접국들과 비대칭적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이다. 중국에 유리한 사실상의 통합(*de facto* integration)을 심화시키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은 경제주의적이나 이면에는 전략적인 고려를 담고 있다. 아세안+3(APT)를 단위로 하고 미국은 제외된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탈미국적 질서를 수립하고자 한다. 그 근거는 전체적으로 중-저수준 자유화를 추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경제의 수준을 고려할 때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서서히, 조심스럽게,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대별되는 경제적 가치를 내걸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베이징 컨센서스가 그것이다. 영국인 라모(Joshua Cooper Ramo)가 최초로 사용한 이 언어는 미국의 경쟁자로서 중국의 발전모델이 미국모델을 대체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예컨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의 중단, 아르헨티나경제의 붕괴 등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기존 자유무역에 의한 발전모델이 파탄에 이른 속에서 중국의 모델이 일종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조영남 2008, 205). 베이징 컨센서스는 사실상 중국정부의 공식주장이다(조영남 2007, 132). 이는 또한 '중국특색의 발전모델' 혹은 '중국모델'로 서서히 전파되고 있다(조영남 2006; Ramo 2004, 3).[1]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경제발전모델이 플랫폼이 되는 무역 아키텍쳐를 본격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권력으로서 현재적 상황을 기초로 한 아키텍쳐를 설계할 필요성이 적기도 하지만 아직 경제 선진국으로서 매력적인 아키텍쳐를 내어 놓을 지식권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까닭이다.

일본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경쟁을 치르고 있다. 동남아국가들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던 일본은 2001 년 중국이 전격적으로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자 서둘러 일-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였다. 또 그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인 이유도 중국을 의

식한 측면이 크다. 중국이 아세안+3(APT)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하자, 일본은 그 대항 구상으로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중심의 포괄적경제연계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CEPEA)을 내어놓았다. 일종의 맞불전략이다. 한편 기능적이고 열린, 투명성 높은 지역협력(open regionalism)을 선언하면서 미국을 끌어들이려 한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미국과 러시아 참여를 환영하며 따라서 아세안+8(ASEAN plus 8)을 지향하고 있다. 이 모든 행보는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시장을 필요로 한다. 불황탈피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일본에게 중국경제는 사활적 존재이다. 민주당 전권은 아시아외교를 강조해 왔다. 초대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은 '번영의 아시아, 녹색아시아, 생명의 아시아, 우애의 바다'라는 네가지 영역에서 협력을 강조한 바 있으며, (アジアへの新しいコミットメント: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實現に向けて 2009) 후임인 간 나오토 수상 역시 취임 시정연설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가치를 사활적 이익으로 강조하고 있다. (新成長戰略 ～「元氣な日本」復活のシナリオ 2010) 일본은 한편으로 중국과 주도권 경쟁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경제를 활용해 경제회복을 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에 대한 비대칭적 의존상태에서 리더십 경쟁은 용이하지 않다. 또한 현 정권은 과감한 정책적 주도권을 추진할 만큼의 국내정치적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중국과 무역질서 주도권 경쟁을 할 행위자는 결국 미국이다. 2000 년대 전통적 맹방 일본을 대신하여 중국이 역내 주도권을 장악해 가는 추세 속에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하여 그 결과 동아시아전략의 공백을 초래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뒤늦게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지역기구를 재활용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몇몇 동아시아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로 링크를 놓으려는 시도는 중국중심의 질서 구축에 대한 전략적 우려가 개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anyin 2006, 34).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에 관여하고자 한다. 2009 년 11 월 일본 방문 시 산토리홀 연설에서 오바마는 '아시아-태평양국가로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전통적 동맹관계의 강화(strengthening the old alliances)와 새로운 파트너십(new partnership)을 함께 추구할 것이라 선언하였다(Obama 2009). 여기서 전략의 중점은 분명 후자에 놓여 있다. 전통적 양자주의로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강조, 아세안(ASEAN)과의 협력관계 강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공식적 참가(engage with EAS more formally) 등 다층적 접근, 또한 경제회복, 균형성장(balanced economic growth),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 등 복수 이슈영역에서 균형적, 복합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를 받아 보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관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Clinton 2010a) 핵심 특징은 다자주의적 접근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이 지역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지역제도들을 만들어가는 추세를 인정하고, 미국은 그 토대 위에서 지역건축물(regional architecture)을 만들어 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의 지역제도는 '명확하고 공유된 목표'를 가져야 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동기'하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실용적 접근'(pragmatic approach)이다. 이어서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은, 이러한 원칙을 제시하는 동시에 미국은 결정적 기구(defining institutions)를 정해야 하며 그 기준으로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제도이어야 한다는 언급이다. 그리고 그 후보로서 비교적 신규제도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꼽는다. 이미 오바마대통령이 산토리홀 연설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은 이 제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동아시아국가들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후보는 기존 제도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다. 동아시아와의 경제적 연계란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APEC)는 핵심기구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 둘 중 하나를 선정하던가 아니면 이 둘을 혼합(mix)해 운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Clinton 2010a, 5).

이어서 클린턴은 2010 년 10 월 28 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지역다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 천명하면서 경제영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비경제영역(비확산, 핵군축, 인간안보 등)에서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활용할 것이라 선언하였다(Clinton 2010b).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단위로 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를 거론하면서 그 핵심적인 추진수단으로 '환태평양 동반자'(Trans-Pacific Partnership: TPP)협정을 꼽았다.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네이로 구성된 기존 무역협정에 호주, 베트남과 함께 가입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산토리홀 연설에서 이미 공식적 가입을 약속했고, 통상대표부는 이 협정이 '아시아와 태평양시장을 잇는 가장 강력한 수단'(the strongest vehicl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USTR 2010, 8).

아시아시장은 미국경제의 회복에 사활적 지위를 차지한다. 지난 2010 년 1 월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회생에 할애하면서 향후 5 년간 수출을 두 배로 늘려 2 백 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 년간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출동과 금융구조조정에 역점을 두었던데 비해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2010 년 3 월 통상대표부가 발표한 〈2010 대통령 통상의제〉이다. 동아시아를 미국경제에 사활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의 시장개방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미국의 근로가정과 기업에 일자리와 사업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환태평양동반자(TPP)는 이런 정책기조를 추진하는 핵심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목적과 함께 미국은 환태평양동반자(TPP)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실 신규 가입하는 호주를 제외하면 경제소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당장 수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여지는 작다. 또 뉴질랜드와 브루네이 이외 국가들과는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독 이 협정을 중시하는 이유는 보다 넓은 견지에서 중국과의 경쟁 때문이다. 동아시아가 중국을 중심으로 엮이면서 태평양이 가로 막힐 것이란 미국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환태평양동반자(TPP)는 태평양의 남쪽을 연결하여 동아시아로 들어가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견제하는 대단히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가입을 제안하고 있다. 동북아까지 엮어 올라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10 년 11 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일본은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였다.

VI. 결론

2008 년 세계금융위기는 동아시아의 무역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는 두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경제가 네트워크적으로 변모하고 그 중심으로 중국이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특히 역내 두 경제선진국(OECD 국가)인 일본과 한국에 대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사이에 증가되고 있는 비대칭적 상호의존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종속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둘째는 미국의 적극적 공세이다. 무역에 관한 한 지구다자적 접근을 추구해 왔던 미국은 테러로 상징되는 패권에 대한 도전을 제어하기 위해 골몰해 온 까닭에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적 권력이동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였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한 지구다자 무역

질서가 벽에 부딪쳐있는 속에서 중국의 부상과 마주하면서 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지역 아키텍쳐를 제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의 아키텍쳐는 네트워크적이다. 소수자 혹은 마음이 맞는 그룹간에 형성된 표준(플랫폼)을 확산하는 유연하고 확장가능한(scalable)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이다. 환태평양동반자(TPP)는 선발 4개국의 미니 FTA 이지만 미국은 여기에 참여하여 미국의 이해를 담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 네트워크에 진입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는 행위자(국가)를 가입시키려는 전략이다. 호주와 베트남이 들어와 설계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으며, 이제 일본도 가입을 위한 본격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에 달려있다. 네트워크의 속성으로서 개방성과 유연성, 확장가능성은 어떤 무역표준을 설계하는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현재 환태평양동반자(TPP)에서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사례에서 그랬듯이 포괄적이고 고수준(high quality), 21 세기 표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시장개방의 폭을 넓히고 미국식 제도로의 조화를 요청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서, 위기 이후 미국식 시장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매력이 쇠퇴하는 세태와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시장주의적 효율을 넘어 빈부격차해소, 생태환경의 고려,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복합자본주의에 근거한 공생네트워크가 시대적 흐름이라면 미국의 플랫폼은 이를 일정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과 연결된다. 국내 보호주의적 경향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서 중간선거 패배를 겪은 후, 수출을 증진하여 일자리를 확대해야 할 절박한 형편에 놓여있다. 국내적 역경 속에서 대외적 매력을 창출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공세에 대하여 중국은 지역 아키텍쳐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 컨센서스나 '조화세계'란 담론으로 드러나는 아시아적 속성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질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이다. 중국 역시 권력교체기에 접어들면서 보다 민족주의적이고 주장적인 외교기조를 유지할 경향성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국내적 조건과 대외적 매력창출의 이중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식권력을 보여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당분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가 그에 비례하는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는 미중간 연성균형이 지속되는 공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

주(註)

[1] 워싱턴 컨센서스가 그렇듯이 베이징 컨센서스 역시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국제관계 전반에 걸친 개혁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이는 여타국가들에게 '경제발전모델인 동시에 국제질서 속에서 자립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 자신의 삶의 방식과 정치적 선택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회발전모델이기도 하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발전모델은 혁신에 기초하고, 둘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평등성(equality)을 우선시하며, 셋째, 대외적으로 자결(self-determination) 혹은 독자성을 추구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곧 시장의 도입에 의한 충격요법(shock therapy)이 아니라 국가주도하에서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개혁, 국내적 균형발전, 독립자주노선 등에 의한 사회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특히 사회적 안정을 중시하는 속에서의 개혁프로그램은 후진타오 시대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조화사회' 즉, 도시와 농촌,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경제와 사회, 인간과 자연, 국내와 국제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고문헌

김상배. 2009.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론》. 서울 : 한울.

손열. 2008a. "일본의 동아시아전략과 공동체론." 하영선 편. 《동아시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____. 2008b. "경제인덱스." 하영선 편. 《동아시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조영남. 2008. "중국외교의 새로운 시도: 소프트파워전략." 《중국외교의 새로운 연구》. 김태호외 편. 파주 : 나남.

조영남. 2007. "중국의 소프트파워와 그 외교적 함의."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손열 편. 서울 : 지식마당.

조영남. 2006.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파주 : 나남.

지만수(미간). 2010. "중국경제의 현황과 미래."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 2007.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CSIS Report.*

Athukorala, Prema Chandra. 2009. "Production Networks and Trade Patterns in East Asia." *ADB Working Paper Series* 56.

Clinton, Hillary. 2010. "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Remarks in Kahala Hotel, Honolulu. October 28.

Dent, Christopher M. 2008. *East Asian Regionalism.* New York: Routledge.

Gowa, Joanne and Edward Mansfield. 1993. "Power Politics and International Trade." *APSR* 87,2.

Grewal, David Singh.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Hatch, Walter. Forthcoming. *Asia's Flying Geese: How Regionalization Shapes Japan.*

Higgott, Richard. 2004. "US Foreign Economic Policy and the Securitization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Politics* 41.

Hirschman, Albert. 1945.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Ikenberry, G. John. 2004. "America in East Asia: Power, Markets and Grand Strategy." In *Beyond Bilateralism: US-Japan Relations in the New Asia-Pacific,* ed. Ellis Krauss and T.J. Pempel.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Kahler, Miles. 2009. "Soft Power and Network Power."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Soft Power held by MOFAT.

Keohane, Robert and Joseph S. Nye. 1976.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London: Little and Brown.

Kirk. Ron. 2009. 7th Annual U.S.-Asia Pacific Council Conference May 6, 2010. Washington, DC.

Krasner, Stephen. 1985. *Structural Conflict: The Third World Against Global Liberal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Lardy, Nicholas and Morris Goldstein. 2009. *The Future of China's Exchange Rate Policy*, Policy Analyses of International Economics 87.

Manyin. 2006. "Prospects for KORUS FTA." CRS.

Ruggie, John Gerard. 1982.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Regimes* 36, 2.

Senate Committee on Finance Press Release. 2004. "Speech of U.S. Senator Max Baucus at the First Annual Asia Forum 'Toward a Strong Asia Trade Policy.' September 21.

Sohn, Yul and Koo. 2011. "Securitizing Trade: The Case of the Korea-US FT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The White House. 2002.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S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Williamson, John. 1989. "What Washington Means by Policy Reform." In *Latin American Readjustment: How Much has Happened*, ed. John Williamson,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Zoellick, Robert B. 2002. "Competing in the Global Economy: Five Ingredients for Success." Conference on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Santa Marta, Colombia.

アジアへの新しいコミットメント: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實現に向けて 2009

新成長戦略 ～「元氣な日本」復活のシナリオ 2010

Ministry of Finance of Japan. “Trade Statistics of Japan.” http://www.customs.go.jp/toukei/info/index_e.htm

Obama, Barack. 2009.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at Suntory Hall.” Tokyo, Japan. November 14.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barack-obama-suntory-hall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0. "The President's 2010 Trade Policy Agenda." http://www.ustr.gov/webfm_send/1673

필자약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손열 교수는 미국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중앙대학교 교수, 도쿄대학 외국인연구원, 와세다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 주제로는 일본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지역주의 등이 있다. 최근 저술로는 "동아시아 경합하는 국제사회 구상" (〈세계정치〉 2009), "소프트파워의 정치 : 일본의 서로 다른 정체성" (〈일본연구논총〉 2009), "Japan Between Alliance and Community" (East Asia Institute Issue Briefing 2009), "Japan's New Regionalism: China Shock, Universal Values and East Asian Community," (Asian Survey 2010, 50:3)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 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김양규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

100-786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